

세계도시

2006. 8. 21 제149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런던의 혼잡통행료 제도

도시경영·경제

1. '모노즈쿠리 신 집적 사업'으로 중소기업간 연대 도모 (동경)
2. 州정부의 지역관광 진흥 예산 과다 지출 논란 (호주)
3. 연방정부와 州정부 간 역할 분담 및 이권 논쟁 격화 (호주)
4. 중복 발행된 백서 대폭 줄이기로 (일본)
5. 과학기술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큐베이터 설치 (북경)

복지·문화

6. 육아 지원 위해 '자녀양육 응원 상점' 모집 (후쿠오카縣)
7. 광산산업 지역 경관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영국 콘월·데본 지역)
8. 육아시설 단기 입소 사업 개시 (동경都 아라카와區)
9. 700만 파운드(약 124억 원) 예산의 테이트 현대미술관 증축 계획 (런던)
10. 파리 시네마 축제 개최 (파리)
11. 아스날 건물이 도시 및 건축정보 전시센터로 탈바꿈 (파리)

도시환경

12. 택시 배출 가스 규제 강화 (런던)
13. 주택건설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권장해 줄 에너지 증명서 발급 (독일)
14. 이산화탄소 줄이기 전담 도시계획가 지정 (런던)
15.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에코 운전 비교 방법 마련 (동경)
16. 녹화사업을 위해 경제림 조성과 관리에 보조금 지급 (북경)

도시교통

17. 자전거 도로망 및 편의시설 대대적 확충 (시드니)
18. 과속 운전자에게 벌금 대신 유료 교육 실시 (런던)
19. 장애인 및 노약자용 콜 버스 전용 운전기사 직업훈련과정 신설 (런던)

도시계획·건설·주택

20. 도시계획과정에 이상기후 현상 반영 필요 (런던)
21. 도시개발과정에서 친환경기준 상향 설정 (영국)

방재·안전

22. 민간 구호 단체와 방송국 연대 비상구호 자원봉사자 육성 (런던)

벤치마킹 사례

런던의 혼잡통행료 제도

<주요 내용>

혼잡통행료 제도 실시 이전 영국 런던의 중심부는 매일 100만 명 이상의 통행자가 도시 내 도로를 이용했다. 이로 인해 도심부 도로의 평균 차량 주행속도는 15km/h 정도로 매우 혼잡했으며, 2000년 기준 혼잡비용은 1500만~2000만 파운드(약 300억~4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켄 리빙스톤 런던시장이 혼잡통행료 징수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했고, 당선 이후 2003년 런던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초기 혼잡통행료는 런던 중심 22km² 지역에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5파운드(약 9000원)를 징수했으며 이후 8파운드(약 1만 4000원)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교통혼잡 감소 및 대중교통 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 런던 도심부로의 접근시간 개선, 효율성·안전성·일관성 있는 교통서비스 및 물류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런던의 혼잡통행료가 교통혼잡 감소, 대중교통 통행량 증가 등의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이러한 효과가 대기오염 감소 및 도시환경 개선 등의 파급효과를 내자 2006년 7월 13일 켄 리빙스톤 런던시장은 런던 도심 혼잡통행료에 환경세 개념을 도입해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4륜 구동 차량 등에 하루 최대 25파운드(약 4만 4000원)까지 통행료를 중과(重課)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평균보다 낮은 친환경차량은 통행료 일부를 감면받게 된다. 이 제도는 도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혼잡통행료 지불 방법도 다양해져 혼잡통행료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입 적용기간을 하루 유예하기로 했다. 혼잡통행료를 당일 자정까지 지불하지 못한 경우 범칙금 100파운드(약 18만 원)를 물어야 했던 기존 제도에 대해 지역 기업가들이 과도한 세금 부과라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이제는 깜박 잊고 혼잡통행료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 다음날 자정까지는 하루치 통행료에 2파운드(약 3600원) 수수료를 더한 10파운드(약 1만 8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해설 및 평가>

런던의 혼잡통행료 징수는 세계의 큰 관심거리다.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 혼잡통행료의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가 도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서울, 동경 등 세계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2003년 도입 이후 3주년을 맞은 런던시의 도심 혼잡통행료 제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각도에서 수행되었다. 우선 제도 도입 주체인 런던시 및 교통공사측은 교통정체가 26% 정도 개선됐을 뿐 아니라 대기질 개선, 도로 안전사고 감소, 도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 대도시 중 유일하게 자가용 중심 교통체제에서 대중교통(자전거 포함) 위주의 교통체제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런던의회는 '혼잡통행료 실시 이후 런던도심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교통량이 2005년에 비해 22%가 줄어 목표치인 20%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와 보행로가 더욱 안전해졌고 자전거와 버스 이용자가 증가했으며 공해물질 배출량이 13~15% 감소했다. 런던 시내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46% 단축되었을 뿐 아니라, 교통시설 투자를 위한 재정을 약 2200억 원 마련했다. 특히 이산화탄소가 16%, 니트로젠 옥사이드가 13% 감소됐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혼잡통행료 부과가 차량 이용을 줄여 대기오염을 저감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정부의 대기오염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 만들어졌는데,

차량과 선박,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여전히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며 평균 8개월 정도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계획과정에서 대기오염문제 해결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혼잡통행료 부과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보수당 출신 의원 및 차량 운전자 등은 혼잡통행료 1일 8파운드(약 1만 4000원)를 지불하고도 3년 전에 비해 평균 시속 1.5km 정도만 빨라졌을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런던의 혼잡통행료는 교통부문에서 직접적인 효과만이 주로 분석되었다. 즉, 버스통행량 증감, 버스통행속도 증감, 교통량 증감, 수익성, 징수시설 등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최근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한 교통량 감소가 대기오염 감소, 도로환경 개선 등의 간접효과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위의 사례는 교통혼잡과 그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고민하고 있는 도시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시에서도 이미 19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2인 이하가 탑승 중인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를 대상(일부차량 면제)으로 혼잡통행료 2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속도는 84% 증가했고 통행량은 13% 감소했으며 통행인구는 11% 증가했다. 그런데 서울시 남산 1·3호 터널에서의 혼잡통행료 징수는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많이 드러냈다. 혼잡통행료 수준과 부과지점의 적정성, 혼잡통행료 징수방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벤치마킹 시행방안>

혼잡통행료 제도는 서울시에서도 교통국 주관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런던의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자체를 벤치마킹하기보다는 서울시에서 혼잡통행료 징수지점을 확대할 때 런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에도 런던과 서울의 도시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혼잡통행료에 환경세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은 혼잡통행료 징수의 확대 시행이 결정되어 징수지점, 징수방법, 요금수준 등이 논의된 후에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서울시에서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한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혼잡통행료 징수지점을 단계적으로 선정할 때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으로 효과성(교통혼잡 완화 및 대기오염 감소 등의 효과가 있어야 함), 간편성(이용자 및 운전자 등이 간편하게 이용해야 함), 비전 이성(혼잡이나 대기오염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전이성이 없어야 함), 대체성(교통수단이나 노선에 대체기능이 존재해야 함), 단속 용이성(위반자를 쉽게 적발할 수 있어야 함), 신뢰성(징수기기 및 단속 기기에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함) 등을 들 수 있다.

<벤치마킹 기대효과>

대기오염의 주 발생원이 승용차임을 고려한다면 승용차 감소는 곧 대기오염 감소와 직결된다. 따라서 혼잡통행료 징수의 가장 큰 간접효과는 대기오염 감소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를 만들겠다는 서울시 정책목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대기오염 감소 이외에 언급할 수 있는 혼잡통행료 징수의 간접효과는 도로공간을 비롯한 도시공간을 승용차에서 대중교통과 녹색교통 이용자에게 되돌려 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신혜 도시교통부 연구위원(newsun@sdi.re.kr)

1. ‘모노즈쿠리 신 집적 사업’으로 중소기업간 연대 도모 (동경)

동경도는 중소기업진흥공사 및 도립산업기술연구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경영자원을 연대하도록 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폭넓은 수주 등의 공동사업을 전개하는 중소기업 그룹을 지원하도록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 제조업) 신 집적 사업’을 200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사업 개시 2년째를 맞이해 3개 지원대상 그룹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그룹은 산학 신기술 개발 연구회, 메디컬 타운 활성화 연구회, 리스카레 오타다. 산학 신기술 개발 연구회는 중증 수발대상자 배변처리 기구와 애완동물 분뇨처리 기구의 실용화를, 메디컬 타운 활성화 연구회는 중소기업 의료관련 회사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리스카레 오타다는 쉽고 안전하게 아스페스트(석면)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치 개발을 사업목표로 제시했다. 동경도가 모노즈쿠리 신 집적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장기적인 경기침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계열관계 붕괴, 후계자 부족으로 제조업 사업장 약 1/3이 폐업하는 등의 심각성 때문이다. 고도화된 시장 수요에 개별 중소기업으로서는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자 업종을 초월한 기업간 연대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7/20g7k400.htm)

>>> 전문가 검토의견

최근 지역산업정책에서 기업의 혁신과 집적을 촉진하는 지원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수도 중소기업청과 함께 추진해 오던 기존의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외에 최근에 산학연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책은 대개 대학 주도로 지식이나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하는 하향 방식을 띠고 있어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애로 해소나 혁신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효과면에서 불확실하다. 이런 여건에서 모노즈쿠리 신 집적 사업과 같이 중소기업내 연구회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상향적 방식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기술적 문제 해결이나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계로의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이나 산학연 협력사업에 적용해 볼 만하다.

/정병순 도시경영부 연구위원(jbs66@sdi.re.kr)

2. 州정부의 지역관광 진흥 예산 파다 지출 논란 (호주)

호주 각 州정부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관광홍보비로 연간 총 2억 3700만 호주달러(약 1680억원)를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져 예산의 낭비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호주협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연방정부에서 자국관광객과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충분한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각 州가 경쟁적으로 지역관광 홍보를 하기 때문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州정부의 보조로 여는 일부 관광 이벤트도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호주관광운송협회 브라운 사무국장은, 각 州의 지역관광 진흥 시책으로 호주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25만 명 이상에 달할 만큼 국내관광의 고용효과가 크고, 국내관광 진흥을 통해 호주인이 휴가를 국내에서 즐기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된다고 호주협회의 지적은 호주의 25만 명 관광종사자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2006. 7. 27)

3. 연방정부와 州정부 간 역할분담 및 이권 논쟁 격화 (호주)

호주에서는 피터 코스텔로 연방 재무상이 제기한 신연방주의 발언으로 州정부와 연방정부간 역할 분담 및 이권다툼 논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 연방 재무상이 주장하는 신연방주의의 주요 핵심내용은 연방정부가 국가경제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데 있다. 연방 재무상은 州정부가 항구와 가스, 수도, 전기를 비롯한 각종 세금 통제권을 연방정부에 이양하라고 제안하고, 연방정부가 GST(Goods and Services Tax) 환급분을 각 州에 재배분하는 대가로 州정부에서 각종 비즈니스 관련 세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각 州정부가 반발하고 있어 연방정부와 州정부 간의 역할 분담 및 통제권에 대한 이권 다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퀸즐랜드州 피터 비티 총리는, 퀸즐랜드州 항구 통제권이 캔버라市로 이관될 가능성은 없으며, 이는 코스텔로 재무상이 차기 집권을 장악하기 위해 발악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호주 정치에 있어 항상 뜨거운 감자인 州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역할 재분담 논쟁이 대선과 병행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2006. 7. 24)

4. 중복 발행된 백서 대폭 줄이기로 (일본)

일본정부는 각 부처가 발행하고 있는 백서 수를 큰 폭으로 삭감할 방침을 굳혔다. 현재 43개 분야의 백서가 발행되고 있지만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작성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교통안전 등 25개 분야, 내각회의 보고용으로 방위·외교에 관한 18개 분야 백서가 있다. 이 중 「순환형 사회 백서」와 「환경 백서」는 통계나 데이터가 중복된다. 이외에 「원자력」과 「원자력안전」, 「경찰」과 「범죄」등 테마가 비슷한 백서도 많다. 내각에 제출하는 문서 때문에 내용 점검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작업 부담이 크다고 지적됐다. 일본 정부는 백서의 '정리해고'를 선언하고, 테마가 비슷한 백서를 통합하거나 불필요한 백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job.yomiuri.co.jp/news/jo_ne_06062621.cfm)

5. 과학기술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큐베이터 설치 (북경)

2006년 7월 28일 북경市 조봉동 부시장이 市의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구축사업 성과보고에서, 북경市에 대학 기반 과학기술단지 14개를 건설하고 그 중 9개 대학이 국가급 과학기술단지로 공인 받아 산학연계 과학기술단지 건립 실적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기지 20곳과 국가 공인을 받은 하이테크산업 인큐베이터 기지 39곳의 2893개 기업이 인큐베이터 과정에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구축사업 실적은 북경市 중관촌 하이테크산업 클러스터의 산학연계 인프라를 지원해 북경市 과학기술혁신 능력에 근거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인 '북경市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계획'에 따라 달성된 것이다.

(www.beijing.gov.cn/zw/zwx/t644976.htm)

6. 육아 지원 위해 ‘자녀양육 응원 상점’ 모집 (후쿠오카縣)

일본 후쿠오카(福岡)縣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다양한 응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녀양육 응원 상점’을 모집해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역사회 전체가 응원하는 환경 조성을 꾀하고 있다.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다. 후쿠오카縣은 2006년에 3000개 상점이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장기적으로는 1만개 상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등록 상점에는 심벌마크가 들어 있는 스티커를 교부한다. 서비스 내용은 크게 경제적 측면과 설비 측면으로 나뉜다. 경제적 측면은 상품 가격 할인, 할인쿠폰 증정, 포인트 서비스, 무료상품 제공 등이며, 설비 측면 서비스로는 놀이방, 어린이가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 모유수유실, 아기 침대, 가족석 등의 설치가 있다.

(www.pref.fukuoka.lg.jp/wbase.nsf/doc/kosodateouennomise?OpenDocument)

>>> 전문가 검토의견

‘자녀양육 응원 상점’ 제도는 육아를 지원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시대의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효과적인 사회지원 체계로 지역사회의 역할로 검토해 볼 만한 제도다. 자녀양육 가정에 카드를 발급하고 지정된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양육 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에서도 자녀양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 시행을 검토해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육아가정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유형의 업체 선정과 충분한 참여업체 수 확보, 참여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sunjakm@sdi.re.kr)

한줄 뉴스

<상해>

- 노동부장국, 2006년 상반기 113개 신종 직업 선포. 30여개는 민생관련 직업으로 삶의 질 높여
- 2006년 7월 17일 전 세계 최대 규모 MBA 순회박람회 개최
- 2006년 상반기까지 143개 다국적기업 지역총본부 설립. 외자 유입 성장세로 질적 수준 제고
- 2006년 7월부터 10월까지 100일간 불법 복제 CD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집중 단속
- 국가환경보호본부, 2010년까지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10% 삭감 목표 제시. 상해市도 2010년까지 오수처리 비율이 80% 되도록 목표 설정
- 고효율 에어컨과 절전형 엘리베이터 등 설치로 에너지 소모량이 일반 건물보다 36% 적게 나오는 과학기술 에너지절약 전시회관 개관

7. 광산산업 지역 경관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영국 콘월·데본 지역)

영국 콘월·데본 지역에 있는 역사적인 광산산업 지역의 경관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유네스코는 1700년부터 1914년까지 활발한 광산산업이 이루어진 이곳의 독특한 경관이 역사적으로 중요해 세계문화유산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 관계자는 역사적 유물만이 보존돼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경관도 다음 세대를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역의 광산산업관련 역사적 경관은 Cornwall and Devon Mining Landscape World Heritage Site Partnership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Planning, 2006. 7. 18)

>>> 전문가 검토의견

역사적 문화자원을 간직하려는 노력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일으킨 영국의 경우 더욱 적극적이다. 건조물뿐 아니라 역사적 경관과 자연경관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다. 우리의 경우 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지원은 없는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다. 한번 잃어버린 역사문화유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보전이 필요한 근대적 역사유물과 문화적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고민해 볼 때다.

/나도삼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8. 육아시설 단기 입소 사업 개시 (동경都 아라카와區)

동경都 아라카와(荒川)區는 보호자가 질병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육아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양육·보호하는 사업을 2006년 6월 1일부터 시작했다. 신청은 이용하고 싶은 날 3개월 전부터 5일 전까지 해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3살 이상부터 중학교 취학 전 아동까지 양육하는 구민이다. 질병, 육아나 간병으로 인한 피로 등의 이유뿐 아니라, 관혼상제, 출장, 공적 행사 참가 등의 이유로도 이용할 수 있다.

(www.city.arakawa.tokyo.jp/a016/d02900101.html)

9. 700만 파운드(약 124억 원) 예산의 테이트 현대미술관 증축 계획 (런던)



미래의 테이트 현대미술관 상상도

켄 리빙스턴 런던 시장은 '런던-문화수도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템스강에 있는 테이트 현대미술관의 신관을 증축하는 데 700만 파운드(약 124억 원)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올림픽이 열리는 2012년에 신관 공사가 완료되면 전시 공간은 6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는 런던 개발청이 담당한다.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8769)

10. 파리 시네마 축제 개최 (파리)

파리 시네마 축제가 2006년 6월 27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 열렸다. 올해로 4년째 맞는 이 축제에 미공개발표 영화부터 오마주(hommage: 유명 배우나 감독을 존경하는 의미에서의 헌정영화)까지 온갖 장르의 영화가 400편 이상 상영됐다. ‘영화의 도시’로 불리는 파리는 12개의 상영관과 대형 스크린을 제공했으며 파리는민은 4유로(약 5000원)라는 특별 가격에 이 영화들을 감상했다.

(www.cinema.paris.fr)

11. 아스날 건물이 도시 및 건축정보 전시센터로 탈바꿈 (파리)

파리시 바스티유 근처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아스날 건물은 파리시 도시 및 건축정보 전시센터다. 이미 문화재로 지정된 옛 병기고(兵器庫) 건물 안에 새로운 내부공간을 만들어 외관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 문화재 건물을 새롭게 이용하는 좋은 사례다. 초기에는 건물 소유주가 사망한 후 술집과 레스토랑으로 이용되었는데 1954년 파리시가 이 건물을 사들여 자료를 보관하기 시작했다. 그 후 건축가 베르나르 헤이상과 필립 호베호가 재건축함으로써 이 건물은 파리 시민에게 파리시 건축과 도시에 대한 교육과 전시를 담당하게 됐다. 건물 2층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 파리시 주거, 오스만의 파리, 2012년까지 454개의 파리시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주제로 매년 전시회가 열린다. 또한 메자닌(층과 층 사이의 공간)으로 된 3층에는 현재 활동하는 전 세계 건축가의 전시회가 열린다. 건축자료실과 영상실, 도서관이 구비되어 있으며, 서점에는 인터넷으로도 책을 판매하고 있다.

(www.linternaute.com/villes/paris/diaporama/06/exposition/pavillon-arsenal/pavillon-arsenal.shtml)

한줄 뉴스

<시드니>

- 유가 상승으로 자전거 출퇴근 급증해 최근 6개월 동안 자전거 판매 매출 20~25% 증가
 - 평일 오전 시드니 하버브리지를 통과하는 자전거 수가 시간당 175대로 지난 10년 사이 5배 증가
- 1992년부터 연방총리와 주총리가 호주정부협의회를 구성해 정책 협조
- 2006년 7월 19일부터 버스와 전철에서 학생이 어른에게 자리 양보 안하면 학생할인 혜택 못 받고 승차 거부도 당할 수 있어

<북경>

- 어린이 치아 건강을 위해 2006년 9월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1000여 곳에 구강건강교과목 개설
- 2006년 8월 1일부터 기존의 종이 재질 지하철 정기권을 IC교통카드로 전면 교체
- 2008년 북경올림픽을 대비한 식품안전관리 국제표준 토론회 개최

12. 택시 배출 가스 규제 강화 (런던)

런던시가 택시 배출 가스 규제를 강화해 도심 공기 개선에 나선다. 현재 런던 도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Nox)의 18%와 미세먼지(PM_{10})의 34%가 택사에서 배출된다. 기존 Euro-1이나 전 Euro 기준 통과뿐 아니라 매년 인증 검사를 할 때 허가된 배출 감소 장비를 장착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08년 7월까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에 대한 Euro 3 기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www.tfl.gov.uk/tfl/press-centre/press-releases/press-releases-content.asp?prID=845)

>>> 전문가 검토의견

서울의 택시는 기본적으로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영국 런던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택시는 이와 달리 경유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PM_{10})와 이산화질소(NO_2) 오염물질을 비교적 많이 배출하는 특성이 있다. 런던시가 택시를 대상으로 배출 가스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시도는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매우 바람직한 정책 추진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매년 배출 가스 인증 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대안으로 매연 여과장치 부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발상은 오염물질 배출 원인에 대해 올바른 처방을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서울의 택시 오염물질 배출 현상과 직결되지는 않으나, 런던시가 택시를 대상으로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저감 장치 부착을 합목적으로 유도하는 정책 추진은 최근 매연 여과장치의 사후관리가 새삼 거론되고 있는 국내의 현 시점에서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woonkim@sdi.re.kr)

13. 주택건설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권장해 줄 에너지 증명서 발급 (독일)

주택이나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이 앞으로 부동산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건물 매매나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물의 에너지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1995년 에너지 증명서 발급이 규정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에 큰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규정됐다. 하지만 개정된 에너지절약 규정이 2006년 여름에 의결되어 2007년 초까지 유예 기간을 거친 후에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 시에 의무적으로 에너지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www.bmvs.de/-,302.955930/energieausweise-Waermeschutz-b.htm)

한 줄 뉴스

- 런던시, 자선단체 주최로 노인복지센터 기금 마련 위해 템스강에서 '런던 오리 경주대회' 개최
- 영국, 171개 구청의 80%가 재활용 에너지 정책 지침을 자체 작성

14. 이산화탄소 줄이기 전담 도시계획가 지정 (런던)

런던시장은 런던 지역의 제로 이산화탄소 개발(Zero Carbon Development)을 위해 모든 구청의 도시계획 부서에 이산화탄소 줄이기를 전담하는 도시계획가를 두도록 권고하고 지침서도 작성했다. 지침서와 전담 도시계획가는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히 런던시 이산화탄소 배출의 75%가 건물에서 나온다고 강조하면서 이산화탄소 줄이기 전담 도시계획가의 신설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런던시장은 밝혔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각 구청별로 줄여야 할 이산화탄소 양의 목표를 정했다.

(Planning, 2006. 7. 27)

15.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에코 운전 비교방법 마련 (동경)

동경都는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저공해 자동차 운전 방법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9월에는 '에코 드라이브 프로젝트 회의'를 열었고, 에코 운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인 (가칭)에코 운전 라이선스를 검토하고 있다. 동경都는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별 연비 성능에 관계없이 에코 운전 정도가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방법을 공표했다. 에코 드라이브 프로젝트 회의는 실제 업무 차량에 주행 데이터 기록 장치를 장착해 데이터를 수집했다.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동경 환경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비교방법을 검증했으며, 실효성이 확인되자 공표한 것이다. 동경都는 앞으로 주행 노선 차이 등에 의한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운전자의 에코 운전 기술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가칭)에코 운전 라이선스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7/20g7k500.htm)

16. 녹화사업을 위해 경제림 조성과 관리에 보조금 지급 (북경)

2006년 7월 31일 제125차 시장업무회의에서 북경시 오하십로(五河十路) 녹화사업 중 경제림 조성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85묘(亩)(약 140km²)에 이르는 경제림대가 대상이며, 市가 매년 경제림대 조성 및 관리 성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8340만 위안(약 10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2000년부터 市는 제2도 녹화구역, 오하십로 녹화사업 등의 도시녹화 중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오하십로 녹화사업은 200m 폭의 녹화 수림대를 조성해 영구 녹화 수림대와 경제림대를 조성한다. 경제림대에는 과수, 묘목, 가로수용 관상수 등 생태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모두 만족하는 수림이 조성된다. 2004년 말 이미 256km²의 녹화사업이 이루어져서 그 중 81.25km²의 영구 녹화수림과 175km²의 경제수림이 조성됐다.

농민의 수익증대를 돕는 유인책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녹화사업으로 평가됐으나 그 동안은 보조금이 없어 기대한 만큼의 녹화사업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2006년부터 향후 5년간 녹화사업 지역에 조성되는 경제수림대에 매년 660m²당 300위안(약 3만 75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기존 경제수림대에는 매년 660m²당 100위안(약 1만 25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성과 격려 정책이 수도의 생태환경 개선에 공헌하고 녹화사업 성과와 농민수입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경일보, 2006. 8. 1)

17. 자전거 도로망 및 편의시설 대대적 확충 (시드니)

시드니市는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전거 도로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자전거 주차장에는 샤워시설, 탈의실, 자전거 수리시설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 수를 5년 이내 250%, 2016년까지 500%까지 늘일 계획이다. 현재 시드니市의 자전거 통행량은 전체 교통량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시드니市는 앞으로 4년간 3억 5000호주달러(약 245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클로버 무어 시드니 시장은, 시드니市를 자전거 이용과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 샌프란시스코,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수준까지 이르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은 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교통 혼잡, 소음, 공기 오염, 수질 오염 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ityofsydney.nsw.gov.au)

18. 과속 운전자에게 벌금 대신 유료 교육 실시 (런던)

런던교통공사와 런던경찰청이 런던 안전 카메라 파트너십(LSCP: London Safety Camera Partnership's)의 일환으로 과속 운전자에게 단순한 벌금 및 벌점 부과 대신 유료 교육을 받도록 해 운전 행태를 바꾸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규정 속도를 경미하게 위반하더라도 엄청난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자 규정 속도를 경미하게 초과한 운전자라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심리학자 등이 참여해 개발했다. 교육 장소는 런던 시내 5곳이고 1회당 72파운드(약 12만 7500원)를 지불해야 하며 과속으로 인한 피해와 과속에 대한 태도 및 심리에 대해 2시간 반 정도 교육한다.

(www.tfl.gov.uk/tfl/press-centre/press-releases/press-releases-content.asp?prID=852)

19. 장애인 및 노약자용 콜 버스 전용 운전기사 직업훈련과정 신설 (런던)

영국 직업훈련제도인 BTEC(Business & Technology Education Council)에 런던市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콜 버스(Dial-a-Ride) 전용 운전기사 양성 프로그램이 2006년 3월 개설되어 운영중이다. 2007년부터 장애인용 콜 버스 운영을 확대할 계획인 런던교통공사는 기존 콜 버스 기사에게 훈련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콜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운전기사 30여명은 장애인에 대한 평등 대우와 콜 버스 운영을 위한 각종 실무 교육을 받은 뒤 동료 기사와 5일간의 실무 적용 훈련을 받았다. 훈련 과정을 마친 기사들은 실전에 배치되어 일정기간 배차 담당자로부터 현장 평가서를 받아 제출하면 공인 자격증도 받는다.

(www.tfl.gov.uk/tfl/press-centre/metro/article.asp?id=1176)

20. 도시계획과정에 이상기후 현상 반영 필요 (런던)

런던 이상기후협회(London Climate Change Partnership)가 최근 런던시내의 온도가 이상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연구한 결과, 런던시 전체 도시계획과정에서 이상기후 현상을 반영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이상기후가 런던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기후 예방지침’(Climate Proofing)을 개발해 도시계획 과정에 적용해야 하고, 런던 각 구청은 건축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인 디자인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lanning, 2006. 7. 20)

21. 도시개발과정에서 친환경기준 상향 설정 (영국)

영국 도시재개발공사(English Partnerships)는 새롭게 시작되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친환경 문제와 관련된 환경표준 상향조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06년 가을에는 상세한 제안서를 통해 영국 내 모든 도시개발 과정이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적인 개념이 잘 반영된 ‘밀레니엄 커뮤니티’ 단지와 ‘에코주택’ 개발 사례를 통해 상향된 환경표준 지침서가 앞으로 영국 전역의 친환경적 도시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환경표준 지침이 다소 높은 수준의 표준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인 흐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Planning, 2006. 7. 21)

방재·안전

22. 민간 구호 단체와 방송국 연대 비상구호 자원봉사자 육성 (런던)

2005년 7월 7일 런던테러 등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간 자원봉사 단체의 활약이 컸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대형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방송국인 BBC London은 적십자, 구세군 등 민간 구호단체와 함께 BBC London ICE(ICE: In Case of Emergenc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웹사이트를 통해 많은 사람이 자원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구호 행동 요령을 작성해 배포하며, 회원이 비상시 구호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www.bbc.co.uk/london/content/articles/2005/10/27/ice1_feature.shtml)